

05 공공안전 및 질서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 관세청 | 기상청 | 공정거래위원회

1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 · 표시
기준 강화

시행일 : 2016년 12월

Before

신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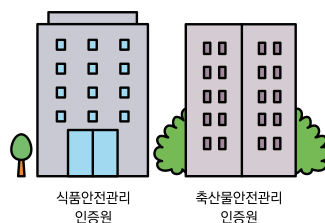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시행일 : 2017년 2월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시행일 : 2017년 5월

Before

신설

After



4

국민안전처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16년 7월

Before



After



5

국민안전처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6

국민안전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시행일 : 2017년 1월

Before



After



1.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과 (☎ 044-203-2830)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기구(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지만,
 -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유기사설·기구에 대해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의무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종 유기사설·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6.11.22.~12.2.)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

- 추진배경 유원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①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기구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
 - ② 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 의무화
 - ③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일(예정)

여성가족부

1.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02-2100-6385/6386) / 권익지원과 (☎ 02-2100-6394)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16년) 37개소 → ('17년) 38개소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됩니다.

*('16년) 3,600여개 → ('17년) 4,600여개

성매매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

● 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년) 11개소 → ('17년) 12개소

<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17.1월 기준)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1	1	1	1	1	1	-	3	-	-	-	1	1	-	-	1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확대

- 추진배경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원 내실화
- 주요내용 ① 해바라기센터 확충(37개소→38개소)
②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급 확대(3,600여개→4,600여개)
③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개소→12개소)
- 시행일 2017년 1월

2.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2)

공공기관 등(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8,000여개)의 성폭력 예방조치와가 의무화됩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도 추가로 시행하며,

또한,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도 의무화됩니다.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이 성폭력 예방조치 등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기대돼’(‘16.11.15)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추진배경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노력을 통한 국민불안감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①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 ②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추진과제 등
- 시행일 2017년 1월

1. 수중레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안전한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044-200-5257)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를 통한 활성화와 건전한 수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수중레저법이 '17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유사한 유도선업으로 창업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으나, 수중레저법 상의 수중레저사업 신설로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수중레저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도,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경제적 부가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추진배경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중레저법 제정
- 주요내용 ① 수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정부종합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 추진
② 수중레저체험사업, 수중레저교육사업 및 운송업 등 신설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 환경부 | 공원생태과 (☎ 044-201-7312)

지역경제 활성화와 탐방객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안·섬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탐방객 편의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현행법령>자연공원법(제18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기준 완화

- 추진배경 지역 주민·탐방객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적 가설건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허용
② 자연환경지구(해안·섬지역) 내 탐방객 편의시설 한시적 허용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2.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 환경부 |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할 경우,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하였을 경우, 냉매의 종류, 판매량,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2017년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추진계획

- 추진배경 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판매량 현황 파악
- 주요내용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오염토양 정화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반출정화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고, 부지면적의 개념이 불명확하였습니다.
- 2017년부터는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 또한,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적용토록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추진배경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 관련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
- 주요내용
 - ①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 완화(200제곱미터 미만 → 300제곱미터 미만)
 - 오염토양 반출정화 요건을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곤란한 경우까지 확대
 - ②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의 면적으로 개념 명확화
- 시행일 2017년 1월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환경부 | 화학제품TF팀 (☎ 044-201-6825)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全)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고시개정안 확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추진배경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② 안전·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 표시사항 추가)
- 시행일 2016년 12월(잠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4)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그동안 분리·운영되어 온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기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7.2.4 시행)

- 이에 따라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통합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 또한,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 추진배경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계획
- 주요내용
 - ① 통합 인증원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② 통합 인증원의 업무
 - HACCP 적용업소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사업
 -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등
- 시행일 2017년 2월 4일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3)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시행합니다.
 - '17년 5월부터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은 물론 식중독 사전 예방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추진배경**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필요
-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등급 공표 등 실시
- **시행일** 2017년 5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를 ‘진료비’ 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043-719-2705)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14년 12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17년에는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시행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 ('15년)사망 → ('16년)사망, 장애, 장례비 → ('17년)사망, 장애, 장례비, 진료비
-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제약업체의 출연재원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면 확대

- 추진배경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상범위 전면 확대
- 주요내용 의약품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국민안전처

1.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 안전제도과 (☎ 044-205-4149)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의무화하여 유선 및 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훈련 유형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기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구분	훈련내용	주기
1. 선내숙지 훈련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매월
2. 퇴선 훈련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매월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 라.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	매월
4.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용 구조	6개월
5.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	6개월

- 또한, 유·도선 사업자·선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연간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을 사망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추진배경 유·도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기별(매월, 6개월)로 실시
 - ② 사업자·선원 등의 교육시간을 연간 4시간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
 - ③ 유·도선 사고발생시 보상기준을 사망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의무화
- 시행일 2016년 7월 19일

2.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국민안전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044-205-4382)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는 2017년 1월 28일부터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 등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전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공포(2016.1.27.) 및 시행(2017.1.28.)

-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 추진배경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의 의무 지정
 -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시간 내에 민방위경보발령 시 건물내 전파
 - ② 관리주체는 전용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통해 전광방송등을 이용 건물내 전파
 - ※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로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할 예정임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3.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국민안전처 | 승강기안전과 (☎ 044-205-4294)

국민안전처에서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그 동안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승강기에 갇힘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기술자가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추진배경 장기사용 승강기 및 갇힘 사고 증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정기화(1회→3년 마다)
 - ②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
 - ③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의무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국민안전처 | 재난보험과 (☎ 044-205-5353)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으로 시설의 관리·점유·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은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소관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내용

- **대상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 **보상하는 손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 **타 의무보험과의 관계** 화재보험법상 신배책부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면제
- **시행일** 신규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042-481-7815)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16년도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재지정 여부와 신규품목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지정 품목(13개) 및 지정종료 품목
 - (재지정)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장명태, 냉동콩치
 - (지정종료) 냉동명태*
- * 국산이 전무하여 관리실익 없음

재지정 기간	재지정 기간
'17.2.1.~'19.7.31.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17.3.1.~'20.7.31.	건고추, 김치,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냉동콩치
'17.2.1.~'20.7.31.	냉장명태
지 정 종 료	냉동명태

- 신규지정 품목(7개) <지정기간: 2017.2.1~2019.7.31>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 지정기간(재지정 포함)은 유통이력신고건수, 신고업체수, 수입신고건수를 고려하여 결정

|참고| 관세법령정보포털 3.0>법령>행정규칙>「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재지정

- 추진배경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신규품목 추가지정
- 주요내용 13개 품목 재지정(다만, 냉동명태 지정종료), 7개 품목 추가
- 시행일 2017년 2월 1일

1.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3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진관측·통보 기관인 기상청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송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그간 지진발생시, 지진 긴급재난문자(CBS)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발송되어 왔으나,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7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 부터는 지진발생시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정보전달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 지진관측·통보 → CBS 자동입력 및 발송(1~3분 이내 대국민 수신)

지진 통보 개선사항

- 추진배경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지진재해 경감 및 국민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한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구축
- 시행일 시스템 구축(2017년 상반기),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2017년 하반기)
※ 지진발생시 대상지역에 위치한 핸드폰으로 자동 발송

2.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항공기상청 | 항행기상팀 ☎ 032-740-2812

소형항공기와 헬기 등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합니다.

- 저고도 항공기 운항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상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가능한 많은 저고도 기상관측자료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항행에 매우 중요해, 항공기상청은 육군과의 협의를 거쳐 군 기상관측자료 150곳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 또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2,600개의 CCTV 영상을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 저고도 > 저고도 기상감시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 **추진배경** 저고도 기상관측자료의 확대 제공을 통한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 제고
- **주요내용** ① 군 관측자료 확대제공(27소 → 177소)
② 유관기관의 CCTV 영상 제공(4개 기관 2,600여개)
- **시행일** CCTV 영상 제공(2017년 1월), 군 관측자료 확대제공(2017년 3월)
※ 군 관측자료의 경우 2016년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3월 제공 예정

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활용하기

| 기상청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 02-2181-0863)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의 낙뢰정보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낙뢰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낙뢰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우리동네 낙뢰정보」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에 낙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위치설정: 전국 도로명·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
 - 관심반경 설정: 10 km 단위로 100 km까지 관심반경 설정
- 「우리동네 낙뢰정보」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정보 > 우리동네 낙뢰정보

2017년도
낙뢰정보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제공
- 주요내용 위치기반 낙뢰정보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7년 6월

1.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과 (☎ 044-200-4466)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2월 23일부터 소비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소량의 위해성분 등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추진배경** 온라인 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주요내용** 화장품,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판매시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정보제공 의무화
- **시행일** 2017년 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2.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 제조업감시과 (☎ 044-200-4517)

기존에 대리점 거래를 규율하던 공정거래법보다 대리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밀어내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본사(공급업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물품 등을 밀어내기 하는 경우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것 외에 해당 물품 가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 대리점거래를 하고 있는 본사들은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잘 준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 개선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서면발급 의무, 구입강제금지,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요 금지 등 8개 의무
- 시행일 2016년 12월 23일

